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최종 폐기'

299명중 찬성 194·반대 104표
尹 거부권 행사한 지 16일만
민주 등 야6당, 부결 규탄대회
“윤 특검으로 확대 발의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거듭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법안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옹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당, 순직해병특검법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민약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본회의서 표결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시 최근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을 더해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국회 본청 로터너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야당은 이날 부결에도 법안 추진을 멈추지 않고 확대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통과 협조도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

무대행은 “특검법은 또 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 외압 국정농단의 의혹을 국민 앞에 낱알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나”라며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과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라면 권력과 민심을 두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곧바로 채해병 사건 관련 '윤석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해당 특검법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특검법이 아니고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윤석열 특검법'을 거부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 방해가 된다”며 “특검만 피하면 탄핵 사유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검 거부가 확실한 탄핵 사유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냥 '채상병 특검 받음'을 잘이라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주진우 의원을 발인대에 세웠다”며 “채상병 특검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광주시의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의 5·18민주화운동 편향·외국 발언을 규탄하며 공식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의원 21명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퇴 촉구 공동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는 과거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표현하고 '폭도들의 선동'이라는 편향적 기사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오월 역사의 의미를 왜곡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5·18단체는 이권단체'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거나 광주항쟁 편향인사인 도태우 변호사를 공개 지지하는 등 (행동으로도) 그릇된 역사관을 보였다”고 밝혔다.

노종면(민주당·인천부평구갑) 의원실이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4월부터 자신의 유튜브(이진숙 TV)에 '5·18단체는 이권단체', '문재인

대한민국 국민 자격 있나' 등 정부를 비판하거나 극우적 내용이 담긴 영상을 여럿 올렸다. 논란이 일자, 현재는 해당 유튜브 채널을 비공개 처리해놓은 상태다.

시의원들은 이어 “방통위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기록, 전달하는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릇된 역사관과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이를 여과 없이 실행에 옮기는 이에겐 결코 방송통신의 수장직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공정해야 할 언론을 향한 국민적 기대를 무시한 채 부적절한 인사를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후보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추진위' 공식 출범

국정농단 제보센터 가동
“정치적·법적 탄핵 투쟁”

조국혁신당은 25일 조국(사진)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탄추위는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가동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증거 확보와 여론 응집에 나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당은 창당 이후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검찰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주장했다”며 “이 정권의 지긋지긋한 무도함과 무책임, 무능력, 무신경에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 20일 1차 전국당원대회 때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적 절차와 요건을 설명하기보다 국민들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탄핵, 퇴진을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의 중심부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윤석열 독재정권의 거대한 방벽에 구멍을 내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다른 야당들도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과 제보는 윤석열 탄핵호를 추진할 강력한 연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22대 총선에서 첫 번째 '엘로우 카드'를 줬고, 여당 전당대회도 총선 패자인 한동훈 대표보다 윤 대통령 측이 미는 후보를

더 미워했다. 이제 레드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탄핵·정권 퇴진을 위한 특검·국정조사 추진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 추진 △채해병 수사 개입·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규명 등을 약속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탄추위는 매주 목요일 공개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위원회(박은정 의원 총괄),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회(신장식 의원), 시민의불결(신장식·김재원의 의원) 등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탄추위 간사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탄핵 소추를 위한) 결정적인 트리거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며 “촉발 요인으로 봤을 때 기저에 국민의 염증과 환멸이 깔려 있고 당이 강하고 빠른 쇄신 역할을 해서 트리거를 마련하는 활동을 선두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도의회 “목포대-동신대 연합, 글로벌30 지정 촉구”

전남도의회가 국립 목포대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의 글로벌 대학 30 신규 지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도의회는 25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역 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지방소멸이 진행 중이고, 빗뚫히는 순서대로 대학이 폐교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교육부는 전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남권 중심 목포대와 혁신적 사립 연합체인 동신대·초당

대·목포과학대 연합을 글로벌대학30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는 “지방소멸 위험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고, 이는 지역 간 극심한 교육 불평등과 지방대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아울러 지방대 쇠퇴는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역과 지방대의 공생을 위한 전략적 협력과 공동발전 모색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월 목포대와 동신대 연합을 포함, 전국 20개소 33개교를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 발표했다. 오지현 기자

나광국 도의원 “소하천 정비율 38%...침수피해 심각” 오미화 도의원 “특별자치도, 공감대 우선돼야”



나광국 도의원

전남지역 소하천 정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전남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사진) 의원이 최근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3년 간 자연재해로 전남의 소하천 피해 규모가 323억원에 달하는 데도 관리주체인 시·군의 열악한 재정 탓에 정비율은 38.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남의 소하천은 381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총연장도 9534km에 달한다. 그러나 소하천 정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46.5%)을 크게 밑돌고 있다. 나 의원은 “소하천은 주변 농경지가 많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취약하지만, 재정 여건상 일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오미화 도의원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재정적 규제특례를 골자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중인 가운데 선언보다는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오미화(진보당·영광2·사진) 의원은 상임위 질의를 통해 호남권 메가시티, 특별자치도 등과 관련해 “정책 결정에 도민공감대도 없이 선언만 남발하는 듯 비춰져 전남도가 바라보는 구체적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전남도의 미래를 구상할 때 행정만이 아니라 도민이 바라는 사항을 담아야 함에도 도민 공청회와 같은 지역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의회와의 소통도 없었다”고 지적한 뒤 “특자도 추진에 있어 단순히 선언적 발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민과의 진정한 소통, 공감대 형성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